

미 중간선거 결과와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

서진교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선임연구위원 (jksuh@kiep.go.kr, Tel: 044-414-1156)

윤여준 선진경제실 구미팀 부연구위원 (yoonyj@kiep.go.kr, Tel: 044-414-1166)

강구상 선진경제실 구미팀 부연구위원 (gskang@kiep.go.kr, Tel: 044-414-1099)

김현수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부연구위원 (kimhs@kiep.go.kr, Tel: 044-414-1087)

차례

1. 미 중간선거 결과
2.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의 특징과 향후 변화 가능성
3.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 시사점

주요 내용

- ▶ 2018년 11월 6일 치러진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예상대로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어 2015년 이후 다시 의회분할(Divided Congress)이 이루어짐.
 - 상원은 공화당이 53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다수당의 위치를 유지하였으나 하원은 민주당이 229곳에서 이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원은 여당, 하원은 야당의 이분구조를 형성
- ▶ 미 중간선거 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슬로건인 자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 등은 전통적으로 노조를 지지기반으로 하는 민주당의 통상정책과 큰 차이가 없어 민주당이 트럼프 통상정책을 적극 반대할 명분이 없음.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이 주로 행정명령을 통해 발동되었기 때문에 의회의 영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통상정책 기조가 바뀌기 어려운 이유임.
 - 다만 의회 승인을 요하는 자유무역협정(예: 미·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비준은 민주당의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어 어떤 식으로든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가 다소 누그러지기는 할 것임.
 - 또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할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과거와 같은 일방주의식 관세부과가 이전처럼 자유롭지는 않을 것임.
 - 한편 민주당 성향으로 보아 미·중 통상갈등은 양국 정상 간 통화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지속될 수 있으며, 지금과 달리 WTO 다자협상이나 CPTPP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 대중국 견제 관점에서 커질 수 있음.
- ▶ 우리나라는 트럼프 행정부 2기 통상정책의 방향에 맞추어 다양한 준비와 전략적 대응이 필요
 - 미국과의 추가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대미 주요 수출품에 대한 실시간 수출동향 체크 및 현지 미국기업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며, 아울러 양국간 미해결 쟁점에 대한 사전 대비도 필요함.
 - 미국은 당분간 일본, EU, 영국 등과의 양자협상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이나 민주당의 성향상 중국제조 2025 등 대중국 견제를 위해 다시 인도·퍼시픽이나 CPTPP 등 지역협력에 대한 관심을 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한편 WTO 다자 차원에서 미국이 제안한 투명성 제고 및 통보 효율화 제안은 중국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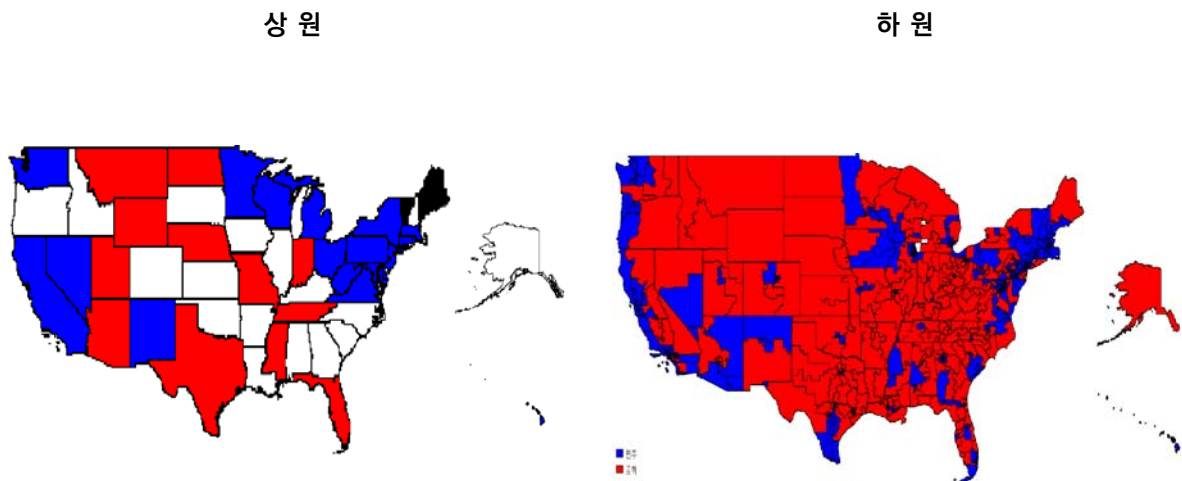
1. 미 중간선거 결과

가. 중간선거 결과

■ 미국 시간으로 2018년 11월 6일 치러진 미국의 제116대 의회 선거 결과 예상대로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여 상원은 기존 공화당이 계속해서 지도부를 형성하게 되었으나 하원은 기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지도부가 바뀌게 되었음.

- 전체 100석 중 35석(정규선거 33석, 보궐선거 2석)에 대한 선거를 치른 상원은 예상대로 공화당이 민주당을 누르고 기존 다수당을 유지함.¹⁾
 - 제115대 기준으로 선거 대상인 35석의 정당별 분포는 민주당 24석, 공화당 9석, 무소속 2석이었음.
 - 이 중 공화당은 11석을 차지하여 기존에 비해 2석을 늘린 반면 민주당은 22석을 차지하는 데 그쳐 2석을 잃게 됨(예상치).
 - 이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됨(예상치).²⁾
- 전체 435석 모두를 대상으로 치러진 하원선거는 민주당이 229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수당 등극이 확실시(예상치)
- 민주당의 하원 장악으로 미 의회는 2015년 이후 다시 ‘의회분할(Divided Congress)’이라는 상황이 도래하였음.

그림 1. 2018 중간선거 결과



주: 파란색은 민주당, 빨간색은 공화당, 검은색은 무소속, 하얀색은 선거가 치러지지 않은 지역.

1) 무소속 의원이 나머지 2석을 차지함.
2) 2명의 무소속 의원들은 각각 버몬트주와 메인주 소속으로 민주당에 가까운 성향을 보유하고 있음.

나. 중간선거 결과 평가

-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게 된 것은 경제 호황에 대한 체감도, 건강보험, 대법관(Supreme Court) 임명, 여성인권, 이민정책 등 선거를 둘러싼 주요 국내 이슈들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로 평가됨.
 - 최근 미국경제 호황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 경제성장률, 실업률 등의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 경제 호황이 아직 실질임금의 상승으로는 나타나지 않아 일반 노동자들의 경제 호황 체감도는 예상보다 낮았으리라는 것이 중론³⁾
 -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정책이 초래할 재정적자 심화와 미·중 통상갈등으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 등은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 경제 문제 이외 중요한 국내 이슈인 건강보험, 이민 문제, 대법관 임명, 여성인권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트럼프 지지보다 큰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
 - 오바마케어(Obamacare)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대한 반감이 하원선거에서 민주당의 우세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반면 최근 중남미로부터 대규모 이민 행렬은 미국 내 사회 불안을 조장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였으나, 하원선거의 전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임.
 - 그 밖에 트럼프 대통령의 여성비하, 성폭행 논란이 있는 대법관의 청문회 통과 등이 전반적으로 공화당에는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상원에서의 다수당 유지 및 기대 이상의 선전, 주지사 선거에서의 선전 등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선거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차기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당초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이길 것이 예상된 상원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 유세로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과 숨은 표가 건재하다는 것을 의미
 - 이에 따라 이번이 없는 한 차기 공화당 대통령 후보경선에서 현 트럼프 대통령을 능가할 후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2.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의 특징과 변화 가능성

가.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의 특징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강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정착되었음.

3)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경제는 2% 후반대의 견고한 성장을 이어간 반면, 실질임금은 2017년 동안 0.94% 증가에 그침.

-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기간 내내 중국을 비롯한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비판하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새로운 통상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을 강력히 피력해왔음.
- 이에 취임 첫 해인 2017년에는 TPP를 탈퇴하였고, NAFTA와 한·미 FTA 재협상에 착수하였으며, 올해 들어 201조, 232조, 301조 등 통상법을 발동하면서 세탁기, 태양광패널, 철강, 알루미늄(이상 전 세계 대상), 로봇, 기계, 우주항공(이상 중국 대상) 관련 수입품에 관세부과 등 일방적 무역제제조치를 취하였음.

표 1. 트럼프 행정부가 실행/실행 예정인 무역제제조치

	대상 품목	대상 국가	추가관세	발효일	비고
201조	태양광패널	전 세계	저율관세할당 (TRQ)	'18/2/7	-
	가정용 세탁기	전 세계 (캐나다 등 제외)	저율관세할당	'18/2/7	-
232조	철강	전 세계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호주 제외)	25%	'18/3/9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은 쿼터 적용 대상
	알루미늄	전 세계 (아르헨티나, 호주 제외)	10%	'18/3/9	아르헨티나는 쿼터 적용 대상
	자동차	조사 진행 중	20~25%		-
301조	1차: 818개 (326억 달러)	중국	25%	'18/7/6	-
	2차: 279개 (136억 달러)		25%	'18/8/23	-
	3차: 5,745개 (1,905억 달러)		10%	'18/9/24	-
			25%	'19/1/1	부과 예정

주: 대상 품목의 () 안은 2017년 기준 상대국으로부터의 관세 대상 품목 수입액임.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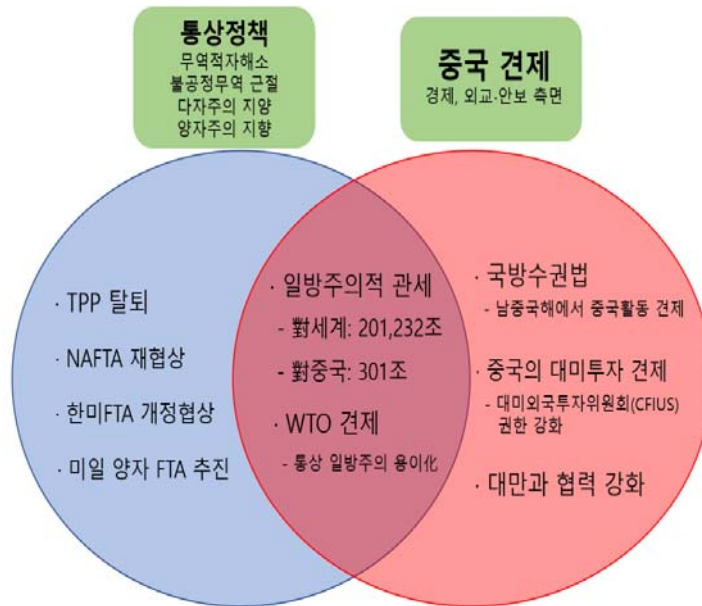
■ 지금까지 드러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크게 △불공정 무역 근절 및 무역적자 해소 △다자주의 거부, 양자주의 지향 △중국제조 '2025' 및 중국의(기술 강국으로의) 부상 견제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NAFTA 재협상과 한·미 FTA 재협상, 각종 통상법 발동 및 관세부과는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이며, 중국을 대상으로 한 301조 발동은 무역적자 해소와 함께 대중국 견제(예: 중국의 기술 강국 부상)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음.
- 아울러 최근에는 WTO 다자체제의 개편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면서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WTO 탈퇴 등 일방주의적 통상정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엿보임.
 -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WTO 탈퇴 위협과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부과 등은 WTO 다자통상체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평가되며, 특히 지난 2016년 중반부터 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 위원 임명을 거부해 WTO 분쟁해결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는 상황임.⁴⁾
 - 동시에 양자주의의 일환으로 미·일 양자간 무역협정 추진을 위해 일본에 압력을 행사하여, 2019년 상반기 중 미·일 양자협상이 개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⁵⁾
-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적, 일방적 관세부과에 기초한 통상정책은 다양한 우려를 양산하고 있음.

4) 상소기구 위원 정원은 총 7명으로 심의에 필요한 최소 인원은 3명임. 2018년 10월 말 현재 상소기구 위원은 3명뿐임.
5) "Trump Eyes a Japan Trade Fight"(2018. 9. 6), *The Wall Street Journal*.

- 그러나 미국의 주류층과 EU, 일본 등 주요국 역시 중국 국영기업의 불공정 행위, 과잉생산을 야기하는 광범위한 산업보조금, 강제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국제통상질서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와 그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

그림 2. 미국의 통상정책과 대중국 정책



자료: 저자 작성.

나. 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

1) 민주당의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에 대한 비판

-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통상규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여타 통상 이슈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음.
 -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관해서는 민주, 공화 양당의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민주당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관세부과조치를 용인하는 분위기임.
 - 다만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조치에 관해서는 대통령 권한의 축소를 주장한 적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⁶⁾
 - 한편 최근 타결된 미·멕시코·캐나다 자유협정(USMCA)은 기존의 NAFTA에 비해 강화된 노동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거나 의회 승인 이전에 멕시코에서 해당 규정이 실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강조하고 있음.⁷⁾

6) "U.S. lawmakers seek to block Trump on tariffs"(2018. 6. 6), Reuters,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trade-senate/u-s-lawmakers-seek-to-block-trump-on-tariffs-idUSKCN1J127G>(검색일: 2018. 11. 6).

■ 다만 민주당 내 계파별로 추구하는 이데올로기의 차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도 통상정책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는 있음.

- 민주당 내 대표적인 진보진영인 ‘의회진보모임(Congressional Progressive Caucus)’은 불공정 무역협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NAFTA 재협상에 찬성하는 등 양자주의에 입각한 보호무역주의를 옹호하고 있음.⁸⁾
- 반면 ‘신진보주의연대(New Democrat Coalition)’는 트럼프 행정부의 TPP 탈퇴를 우려하는 등 다자 자유무역주의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⁹⁾ 트럼프 행정부의 양자주의적 통상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임.
 - 신진보주의연대는 소비자물가 상승, 보복관세에 따른 수출업체 손실, 미국 주도 국제경제시스템의 약화 등을 이유로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관세부과를 비판¹⁰⁾

2) 미국 내 전문가들의 시각

■ 대체적으로 중간선거 결과로 미국의 통상정책이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고 있음.

- 미 중간선거에서 통상은 일반 국민의 관심을 끄는 중요 이슈가 아닐 뿐더러 대중 관세부과조치가 주로 중간재에 집중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관세부과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간선거의 결과로 트럼프 행정부의 현 통상정책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
 - Washington Post 여론조사나 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통상은 미 국민들이 중시하는 이슈 순위에서 8~10번째를 기록, 미국 내 소비자들의 통상정책에 대한 중요성은 건강보험이나 감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다만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민주당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 조치를 두둔하고 있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
 - 민주당도 러스트 벨트 노동자들의 지지를 되찾기 위하여 공화당과 경쟁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중국 강경정책을 일방적으로 반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다만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을 세밀히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제한 효과도 기대 가능

- 민주당이 하원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반을 세밀히 조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관세부과 등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하여 사전 협의 등 기술적인 관여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

7) "USMCA, the new trade deal between the US, Canada, and Mexico, explained"(2018. 10. 2), Vox, <https://www.vox.com/2018/10/2/17923638/usmca-trump-nafta-trade-agreement>(검색일: 2018. 11. 6).

8) Congressional Progressive Caucus, "A Fair Trade Agenda: Renegotiating NAFTA for Working Families," <https://cpc-grijalva.house.gov/a-fair-trade-agenda-renegotiating-nafta-for-working-families/>(검색일: 2018. 10. 26).

9) New Democrat Coalition, "New Democrat Coalition Chair and Trade Taskforce Co-Chairs Statement on NAFTA Renegotiation Letter," <https://newdemocratcoalition-himes.house.gov/media-center/press-releases/new-democrat-coalition-chair-and-trade-taskforce-co-chairs-statement-0/>(검색일: 2018. 10. 26).

10) New Democrat Coalition, "New Democrat Coalition Members' Statement on Trump Administration's Tariffs on China," <https://newdemocratcoalition-himes.house.gov/media-center/press-releases/new-democrat-coalition-members-statement-on-trump-administration-s/>(검색일: 2018. 10. 26).

3) 변화 가능성 전망

■ 트럼프 행정부 1기 통상정책의 기초는 대체로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슬로건인 자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제조업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1기 통상정책의 기초는 전통적으로 노조를 주요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의 통상정책과 큰 차이가 없어 민주당이 이를 적극 반대하기는 근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대중 무역정책을 비롯해 통상정책 일반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큰 입장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 현재까지 나타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을 적극 반대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 민주당에 하원 다수당의 지위를 넘겨준 주요 원인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있다기보다 러스트 벨트 지역 저소득층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는 오바마케어의 폐지, 사회안전망 축소 등 실생활과 직접 연계된 정책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실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는 러스트 벨트 지역 민주당 후보들도 찬성 의사를 표명
- 아울러 대중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등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주로 행정명령을 이용했기 때문에 의회로부터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다만 의회 비준을 필요로 하는 무역협정의 체결이나 비준, 그리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라고 해도 그 절차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 등을 이유로 종전과 같이 의회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행태는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의회의 동의나 비준을 요하는 주요 통상협정(예: 내년 초 개시 예정인 마일 무역협정 등)에 대해 민주당과의 협력은 불가피하며, 통상 관련 대통령의 행정명령 남발을 제어하기 위한 의회의 조치도 예상해볼 수 있음.
- 의회 비준이 필요한 USMCA의 경우, 의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음.
- * 예를 들어 민주당이 중시하는 건강보험이나 이민정책, 환경 등의 이슈를 관철하기 위해 무역협정에 대한 동의를 전략적으로 늦출 수는 있음.
- 아울러 대통령에게 통상의 주도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행정명령 남발에 대한 기술적인 견제도 가능
- * 예를 들어 통상 관련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한 사후조사나 사전협의 등의 절차요구 법안이 초당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음(공화당 일부 의원도 동일한 문제의식) 다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실현 여부는 미지수

■ 2기 통상정책의 세부 추진전략은 바뀔 가능성이 있음.

- [대중 무역전쟁] 지금까지는 관세부과 등을 통해 중국을 직접 압박했으나 앞으로는 다른 채널을 통해 중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있으며, 양국 정상 간 통화 및 대화 재개에도 불구하고 향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존재
- 광범위한 산업보조금 지급, 강제 기술이전,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 등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문제 인식은

민주당도 공감하고 있으며, 단지 이를 구체화하는 방식에 있어서 의견 차이를 보여왔음.

* 민주당은 중국 문제 해결을 위해 관세부과보다는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한 방식을 강조

-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EU 및 일본, 캐나다 등 소위 선진국 연합을 추진하고 있음.
- [양자통상정책] 이미 끝난 또는 향후 진행될 양자 FTA를 통해 국내에 성과 과시 및 대중국 압박 카드로 활용
 - 이미 협상이 끝난 미·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중국에 대한 통상 압력, 한·미 FTA 재협상과 향후 예상되는 일본 및 EU와의 양자협상을 감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에 강조해왔던 대로 주요 대미 상품무역 수지 흑자국과의 양자협상을 하나씩 마무리 짓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함.
 - 이에 미국은 앞으로도 대중, 대일, 대EU와의 양자협상에 큰 관심을 둘 것이며, 차기 대선을 의식하여 국내 성과 과용 결과 획득을 중시할 것임.
 - 아울러 USMCA에 포함되었던 비시장국가(NME)와의 교역 시 상대국에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EU, 일본, 그리고 영국과의 FTA에도 삽입될 가능성이 높음. 이는 사실상 중국과의 FTA 체결 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을 미국 중심의 경제블록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고립시킬 수 있는 전략임.
 - 다만 앞서 언급한 대로 미·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은 민주당 주도 하원에서 통과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음.
- [다자통상정책] 현재 대중 압박전략의 일환으로 다른 선진국들과 함께 WTO 체제 개혁을 시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전략은 계속될 전망
 - 현재 미국 등 선진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영기업 규제, 보조금 투명성의 제고, 개도국 세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WTO 체제 개혁을 추진 중임.
 - 민주당이 WTO 다자체제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2기 트럼프 통상정책은 WTO 탈퇴와 같은 기존의 위협 전략보다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한 WTO 체제 개혁, 혹은 WTO 체제 바깥에서 동맹국들과의 직접적 연대를 통해 중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할 수 있음.
 - 한편 TPP를 지지했던 민주당의 성향상 대중국 견제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인도·퍼시픽이나 CPTPP 등 지역 협력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다시 커질 수도 있음.
- [통상정책과 국내정책의 정치적 교환 가능성]
 - 통상은 우선순위가 낮은 이슈로 특히 이민정책이나 건강보험, 감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등이 민주당으로서는 보다 정치적 영향이 큰 이슈임. 따라서 이민정책이나 건강보험 등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민주당은 통상정책을 버리는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음.

3.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 시사점

- 당분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라도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일방주의에 기초한 밀어붙이기식 통상정책을 견지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준비와 대처가 필요함.

가. 양자 및 지역협력 차원

■ 미국과의 추가 통상마찰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미국의 추가 요구에 대한 사전 대비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 비해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지지세가 부진했던 러스트 벨트 지역의 민심을 다시 잡기 위해 자국 산업 보호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여기에 민주당이 중시하는 노동 및 환경 관련 조항의 강화가 추가될 수도 있음.
- 이에 우리나라는 미국과 예상되는 통상마찰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하면서 미국의 추가 요구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대미 주요 수출품목들에 대한 실시간 수출동향 체크 및 미국 내 현지 기업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미국의 반덤핑 등 규제에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보다 근본적으로는 무역의 다각화를 통해 G2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
 - * 현재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을 통해 ASEAN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중남미 신시장 개척도 필요
 - 한편 민주당 다수의 하원은 노동 및 환경을 중시, 이를 우리에게 요구할 수도 있으며, 쌀 관세화 역시 양국 간 미해결 쟁점으로 철저한 사전 대응이 필요

■ 미·중 통상갈등의 재점화 가능성에도 대비

- 양국 정상 간 통화 및 대화 재개로 미·중 무역갈등이 단기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으나, 미·중 갈등은 미국 요구에 대한 중국의 대응 여하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격화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미·중 통상갈등 재점화 가능성에도 대비, 기존 우리 해외시장의 확대 가능성을 포함해 시장 다각화를 추진할 필요
- 다만 미·중 간 갈등이 WTO 개혁이나 FTA 체결을 통해 중국을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지속될 경우 그에 따라 나타날 결과를 주시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함.

■ CPTPP 참여를 위한 준비

- 2019년에 일본 및 EU, 영국과의 양자협상 추진이 예정되어 있으나 대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퍼시픽 (Indo-Pacific) 또는 CPTPP와 같은 지역통상협력에 다시 관심을 보일 수도 있음.
- 특히 하원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TPP를 지지했던 점과 동맹국 간 지역협력이나 다자통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 관점에서 차기 대선전에 미국의 TPP 복귀 내지 CPTPP 가입 등의 돌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음.
 - 미국은 중국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나 부상 억제에 유용하다면 언제든지 TPP 복귀나 CPTPP 가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봄.
- 미국이 CPTPP 가입에 관심을 보이면 그 이후엔 우리나라의 CPTPP 가입이 여의치 않을 것이므로 가입

비용의 최소화나 국내제도의 개혁 차원에서 CPTPP에 대한 가입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필요

- 미·중 갈등에서 촉발되는 국제통상질서 재편 움직임과 불확실성 심화도 우리나라의 CPTPP 가입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

나. WTO 다자협력 차원

■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의 WTO 체제 개혁에 적극 참여

- 미국은 그동안 WTO 다자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일방적 관세부과, WTO 탈퇴 등의 발언을 통해 WTO 체제를 위협해왔으나 최근 들어 WTO 체제의 개혁을 언급하면서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기여를 강조하고 있음.
- 미국은 지난 11월 1일 중국의 국영무역과 산업보조금을 겨냥해 EU, 일본,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등과 연합해 통보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제안을 한 바 있음.
- 특히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개선은 중국시장에서 우리 기업과 중국기업 간의 공정 경쟁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국제논의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KIEP**